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9-131
----------	--------

발의연월일 : 2019. 9. .

발 의 자 : 이필테 외 17명

## 1. 주문

별첨 “결의문”과 같음

## 2. 제안이유

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8월 2일 포괄적 수출우대 자격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양국관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나. 일제의 강제 합병 등 역사적 과오를 무시하고 21세기 첨단산업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천명한 G20 정상회의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협정 등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전 세계의 산업체제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 평화공존이라는 시대적 사명도 저버리는 것임.

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비이성적이며 반 평화적인 경제보복과 부당한 수출규제를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3. 이송처: 정부(외교부), 전국시군구

4. 불 입: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문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포괄적 수출우대 자격인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기로 하는 등 부당한 경제침탈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의 이러한 경제침탈 행위는 WTO 협정을 위배하는 것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합의를 이룬 2019년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상호호혜적인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의 회피 등 우리민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역사왜곡을 자행해 왔으며, 작금의 수출규제 또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일관하며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유무역주의에도 역행하는 경제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역사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우리 마포구의회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9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